

## 17대 총선과 한국 사회운동

김 동 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1. 탄핵, 촛불시위와 4.15 총선 1

3월 12일 탄핵가결 이후 한국사회에서 전개된 일련의 사건은 운동정치, ‘바람의 정치’가 권력의 교체와 제도 정치의 변화를 강제했던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 정치사의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1960년 4.19 정국과 7.29 총선, 87년 6월 항쟁에서 13대 대선, 그리고 2000년 16대 총선의 낙천 낙선운동까지는 선거라는 절차가 한편으로는 무정형적인 시민사회의 요구와 대중의 정치 변화 열망의 결절점으로 작용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반영했으면서도 다른 편으로 그것을 봉합하면서, 권력관계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온 역사였다. 그러나 이번 탄핵국면은 과거와 달리 대중적 저항운동이 출발점이 아니라, 국회의 다수를 점하는 보수 야당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대통령을 탄핵한 일종의 구태타적인 사태가 촛불시위라는 운동을 불러왔고, 대통령 탄핵에 의해 조성된 대중적 불만이 일부 지역주의로 회귀하기도 했지만 보수독점 제도정치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촛불시위라는 운동이 오히려 탄핵사태의 결과로서 등장했고, 선거가 운동의 열기보다는 탄핵정국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선거가 정당 간의 정책경쟁이나 조직된 정치, 사회세력의 참여, 대중적인 정책 토론과 과거 국회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기초해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거 한국 정치사의 패턴을 답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선거 이후의 정치는 또다시 정치권 밖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상황이나 세력간의 힘의 역학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다. 그런데 선거 제도라는 것은 대중의 즉자적인 요구와 불만을 언제나 제한적으로만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일단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정치권 밖의 행위자는 뒤로 물러나고 모든 정치적 행위와 실천을 선거제도가 만들어준 제도정치의 절차와 대의기구가 또다시 독점하게 되었다는 점은 한국 역시 현대 대의제 국가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한국에서의 ‘운동정치’의 동력은 조직된 소수의 민주화의 열망과 개혁적 의지, 그리고 익명의 다수가 견지한 정의(justice)와 도덕의 감각이었다. 분단, 한국전쟁이 구축한 보수 독점의 제도정치는 대중의 경제적 소외, 정치권력의 부패와 부정 등의 자기 모순을 노정시켜왔고, 그 모순은 제도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대중의 반란을 야기시켰다. 운동을 주도한 소수는 비록 일관된 정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었을지 모르나 대중의 불만은 조직적이고 반체제적인 것이 었다기 보다는 다소 표출적(expressive)이었으며 반정권적이었다. 즉 대중의 이반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기반 즉 선거정치와 선거게임의 정당성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국 기성의 권력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정당이나 그 주변 인사들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운동정치의 주역들은 정치권 진입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들은 선거정치 물신주의, 기존 정당의 정치 독점 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처럼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한적, 봉합적, 타협적으로 받아들인 새로운 정치 질서는 새로운 모순을 낳았고, 새로운 형태의 운동정치를 발생시켰으며, 새로운 저항과 타협의 기회를 만들어 냈다.

정치개혁의 동력이 제도권 내에서의 정당 간의 갈등이나 정책 경쟁이 아닌 도덕과 정의의 관념에 기초한 운동 혹은 바람(風)에 있으므로 해서 선거정치 시 인물의 정치가의 교체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으나( 88년 총선 당시 50%, 이번 선거 62%), 새로운 정치세력은 모두 제도정치의 용광로 속에 녹아들었다. 선거 정치 물신주의 즉 선거참여 =

민주주의는 해방정국 당시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얻었던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즉 반공 자유민주주의)에 기원을 둔 것으로서 '다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차단한 미국 영향권 하의 정치 모델의 기제 속에서 학습해온 한국인들의 즉자적인 정치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바로 정권의 교체, 정치권 '물갈이' 요구는 바로 이러한 정당화 기제 속에서 대중들의 '현실적 선택'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언제나 투표용지의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배반되었으며, 한국의 유권자들은 지난 50년 동안 이 시지프스의 돌을 굴러왔다. 이것은 한국의 오랜 중앙집권적인 정치문화와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지만 국가의 시민사회 압도, 권력창출을 위한 하향식 조직으로서의 정당, 정책 노선 선택과 이념 논쟁이 가능하지 않았던 반공 정치지형,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형식민주주의) 만이 민주주의라고 믿어온 냉전 정치의 귀결이었다.

물론 군사독재 하에서도 선거물신주의는 운동정치를 제도내화시키는 정신적 기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민주화 즉 대통령 직선제를 향한 동원의 기반이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모델의 무비판적인 이식, 오랜 정당정치 경험 축적과 정책적 일관성에 기초하지 않은 제도 정치, 그리고 도덕주의 공격에 대한 자기방어로 일관한 기성 정치집단은 때로는 사회발전 수준에 맞지 않는(혹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진보적인) 입법화를 가능케하기도 하였다(53년 노동법, 77년 국민의료보험 도입, 97년 이후 4대 보험 완성, 국민의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의약분업, 이념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이것은 정당의 오랜 검토투와 논의, 대중의 조직적인 동원과 요구와 무관하게 정치적 타협이나 최고 권력자의 결단에 의해 일종의 수동 혁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즉 운동정치는 역동성을 갖고 있었으며 각종 제도개혁에서도 다소의 비약과 역설을 가져오기도 했다. 경제 영역에서 재벌체제는 의연히 존속했으며 개별 기업과 재벌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명멸한 한 것처럼 정치영역에서도 보수정치는 계속 지배력을 가졌으나 개인 정치가는 무자비하게 퇴출되었다.

이번 선거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난 50여년의 한국정치를 이끌어오던 냉전적인 수구 보수정당이자 경상도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이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것이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의 10석 획득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각 당의 지지율을 보면 한나라당이 몰락한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보면 충청도와 전라도의 자민련, 민주당 지지표가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 민노당으로 이전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충청도와 전라도에서의 지역주의의 약화로 해석할 수 있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곧 87년 이후 그 수명을 연장해오던 보수독점 제도정치의 기세를 꺾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개혁적인 다수당인 우리당 이제 지역정당의 성격을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새 정치의 출발점에 서 있으나 그 정당의 조직 자체는 위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거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이유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조직된 당원과 나름대로의 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진보정당이 아니라 분단 이후 최초의 정당다운 정당이며, 여기서 민노당이 우리당을 비롯한 기성 정당을 진정한 새로운 정당으로 변화시켜 정책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가가 향후 한국정치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었다. 다수당인 우리당이 진정한 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고 '부르주와 정당'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다.

즉 이번 선거는 한국 정당정치 지형 - 즉 냉전 하에서 지속되어온 보수 여야 독점, 권력창출 기구로서의 정당, 위로부터의 정당 조직화, 공천권 행사를 축으로 한 대통령 혹은 총수의 정당장악, 정당과 음성 정치자금 동원 -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되었지만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 2. 새로운 (정당) 정치의 '탄생'과 '절름발이 정치'의 역설

### 1) 새로운 정치의 등장 가능성

그 동안 한국의 만성적 정치 불안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제도 정치가 대중의 삶과 유리되었으며, 정당정치가 제도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노동자와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등 정당이 시민사회가 아닌 국가의 일부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당정치가 즉 제도정치가 선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의 견인차는 앞서 말한 운동정치와 최고권력자(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죽기 살기의 투쟁을 벌여온 일종의 하루살이 붕당 간의 권력투쟁이었다. 핸드슨(Henderson)이 말한 것처럼 권력의 정점을 향한 ‘소용돌이의 정치’에서 정당이 시민사회의 일부로서 서기는 어려웠다. 즉 권력창출의 도구였던 정당은 자신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면 언제나 명칭과 대표만 바꾸면서 명멸해왔고, 개혁적인 법안은 언제나 정당 밖의 시민사회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의지, 그리고 권력 장악을 위한 고려 하에서 다수당의 정략에 의해 만들어 졌고, 우연하게 통과되어 왔다. 정당은 있었으나 정당정치는 없었다. 그리고 정당은 정책과 비전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었으며, 정책적 논의는 부차적인 지위만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정책생산자로서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치투쟁의 장에 투입하는 전단 벨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오게 되었다. 정당은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여성, 소수자의 목소리는 정당정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전투적 노동운동, 극한적인 지역주민 운동, 정치에 대한 총체적 불신 등으로 나타났다.

의회의 기능은 입법 활동 및 행정부 감시로 집약된다. 그런데 냉전 보수 세력이 다수의석을 독점해온 지금까지 의회는 각종 개혁적인 입법을 좌절시키고 소위 운영, 국감 등에서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봉쇄하였다. 그것보다도 의회 자체가 아예 일상적 활동기구로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의원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지역구 관리와 모금, 차기 당선을 위한 정치에 바쳤다. 의원들의 정치생명은 각 당의 보스가 쥐고 있었으므로 개인 정치가는 자신의 소신과 정견을 앞세울 수 없었으며, 공천권과 정치자금을 쥐고 있는 보수에게 일방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당의 다수의석 차지는 그러한 정치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승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돈이 개입하지 않았던 선거였으며, 다수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우리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는 밀실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정치라는 것은 가진 자와 배운 자의 관심사라는 역사적 전제 위에서 진행되었다. 즉 현대판 노복(奴僕)인 노동자, 여성은 이 정치의 주인이 아니었다. 범사노복(凡使奴僕)에 선념기한(先念飢寒)(노복을 부릴 때는 우선 그들이 춥고 배고픈지를 먼저 살필 일이다)이라는 말처럼 정치의 근본은 민중의 배고픔 해결이지만 민중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정치의 주체는 아니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관념은 사회적으로 그대로 연장되었다. 7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난바 민중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괴리, 혹은 학생운동의 정치지향성과 민중운동의 경제주의적 성격 간의 괴리는 바로 전근대 시절에 고착된 선비 = 정치가, 민중 = ‘다스림을 받는 자’의 도식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 왔다. 정의와 도덕의 관념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적어도 배부른 사람들의 정신적 사치, 혹은 새 신분지위를 획득한 엘리트 부르주와들의 정치적 관심의 표현이기도 했다. 냉전체제는 구조적인 반노동자 지배체제이며 이 지배체제 하에서는 배고픔과 노동인권 제약의 문제는 오직 간접적으로만 정치적 의제로 설정되었다. 바로 이번 탄핵정국에서 보인 노동운동 세력의 혼란스러운 태도(탄핵지지론의 등장)는 이러한 현실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민노당의 10석 장악, 여성의 13% 의석 차지는 바로 지난 1,000년 이래 지속되어온 정치의 개념을 바꾼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다수당인 우리당, 그리고 민노당의 일부인사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신분자격증(서울대, 혹은 명문대 출신)을 얻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어떤 점에서 분명히 판갈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서

는 기존의 판이 그대로 남았다.

대통령 탄핵 사건은 97년 이후 권력의 중요 기반을 계속 상실해온 장-언 유착의 보수세력의 자충수에 의한 권력 찬탈 시도였는데, 결과적으로 선거물신주의, 정당과 정치독점, 제도정치의 반대중성을 폭로한 계기였다. 탄핵은 전통적인 운동정치를 촉발 재연시켰는데, 이번의 운동정치는 과거의 그것처럼 다분히 표출적이었고 비조직적이었으나,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변혁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즉 탄핵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교체라는 정치적 지향은 과거의 운동정치가 그러하였듯이 단순히 제도정치권의 교체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의 정치적 대표성 자체에 대한 회의를 깔고 있었다. 대중들은 선거정치가 다수의 전제, 다수의 횡포로 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위임된 의회권력이 대중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국회의 다수파인 한나라당을 불신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민노당에 대한 지지는 우리당에 대한 지지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정책 투표, 계급투표의 결과가 아니라 운동정치의 한 귀결이며, 구 정치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역으로 나타난 것이다. ‘탄핵 심판’이라는 선거 국면 당시의 용어는 내용적으로 본다면 국민들에 의해 위임된 의회권력의 횡포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며, 이것은 한국에서 정치의 위상을 새롭게 정조한 계기가 된다. 즉 냉전 하의 시민사회와 분리된 정치사회, 그리고 뿌리 없는 선거정당, 선거물신주의, 보수 독점의 정치 질서가 이완되거나 해체될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는 말이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의회는 대의기구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어렵פות하게 학습되기 시작했다.

## 2) ‘절음발이’ 일 수 밖에 없는 정치

한국의 정치가 운동정치에서 정당정치로 이전해 갈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은 한국 정치가 서구 민주주의의 틀에 보다 근접해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치는 한국 시민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요구를 제한적으로만 반영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금권정치는 아니지만 노동자와 여성의 대표성은 아직 극히 미미하고, 경상도에서 한나라당이 의석을 싹쓸이 하였으며, 당선자의 수입은 우리나라 주민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리고 7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세력의 다수가 아직 (혹은 앞으로) 제도 정치권 밖에 존재하고 있다. 제도정치는 어떤 비전과 희망을 등에 업고 의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한국식의 탈냉전의 정치 구도 하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당의 등장이하 정당정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은 사실 정당의 기반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현실과는 크게 대비된다. 68년 이후 유럽에서의 신사회운동의 등장, 미국과 일본에서의 투표율 저하, 탈정치화 현상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재 분리의 표현인데, 한국에서는 분리되었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결합으로 나아가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이것은 국가 혹은 행정부가 사실상 정당의 역할을 대신해오던 권위주의 체제, 혹은 냉전 정치체제에서 이탈해가는 한국적 특이성의 반영이하 할 수 있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결합은 이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구 보수세력은 자신의 존립을 위해서 이제 국가기구(공안기구, 군대, 행정부)가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을 인지하고 정당을 강화하거나 정당이라는 통로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예를들면 의사협회의 한나라당 올인 전략) 더러는 새로운 정당(예를들면 기독교당) 창립 작업에 나선 바 있다. 반대로 젊은층은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우리당과 민노당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쏟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젊은이들, 혹은 기성인들 중에서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정당의 자발적 후원자가 되고 당원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치가 개인에 대한 인기가 정당에 대한 지지

로 변할 수 있을까? 이 점에서 한국의 정치 실험은 세계적인 실험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뒤늦은 탈냉전 분위기 하에서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계기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국가단위의 정치가 문제해결의 중심 축이 되기에는 실질적인 제약이 많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미국의 패권주의와 세계체제 하에서 제한된 입지를 갖고 있는 국민국가로서 한국의 국가가 처한 위상이 첫째 이유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의 정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두 번째의 이유고, 관료들의 반격이 세 번째 이유다.

즉 선거가 끝나자마자 주변을 돌아보면 세계체제 내에서 수출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해외경제 의존형 국가이자 미국주도의 동아시아 질서 하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의 국가, 대통령과 정치집단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입지가 대단히 좁고, 따라서 제도 정치는 한국인 유권자들이 기대했던 바를 거의 성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현재의 제도정치권은 국민의 반대 여론이 비등해도 이라크 파병 문제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으며,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미국과의 '특수 관계'를 조정하는데서 무능력을 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개혁적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지지자들을 급속히 이탈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결국 현재 세계 질서 하에서 유일패권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 그리고 동아시아 정치질서 내에서도 강대국에 끼여 있으며 남북 분단 상태에 있는 국가인 한국의 선택지는 국내 정치 세력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위에 있다는 점, 즉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결정과정과 정치는 여전히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최고의 활동 즉 안보/전쟁/국방과 관련된 영역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국가 내의 정치세력이 그 문제를 본격적인 의제로 삼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것이다. 이 점은 우리당의 젊은 개혁적 의원들이 애초 의견을 바꾸어 이라크 파병론에 찬성하게 된 행동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둘째, 자본주의 하의 '시장에 반하는 정치'(politics against market)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 하의 국가, 나아가 사회질서는 자본축적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즉 정치와 사회는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모든 정치일정이나 사회개혁의 과제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정치세력은 기업의 자본축적 활동을 건드리지 않는 개혁은 추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한하는 조치는 거의 손을 대기 어렵다. 지금 브라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설사 노동자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세계경제 질서와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과연 현재 한국의 정치권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개혁, 환경 규제 강화, 공정거래의 원칙의 강화,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친노동 입법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삼성의 심기를 건드리는 입법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부정적 징후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셋째 자본주의 하에서 선출된 권력(의회, 혹은 정치)과 선출되지 않는 권력(자본)의 긴장의 문제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이 두 권력의 긴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이 새로운 세력으로 충원됨으로써 이제 양자의 충돌은 본격화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선출된 권력으로서 국회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체인 관료집단과의 관계에서 무능력을 노정할 가능성이 높다. 전자가 시민사회의 일부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일수록 후자는 자신이 국가라는 점을 더욱 강하게 드러낼 것이다. 국방부가 '정부 내의 정부'로서 여전히 역할을 한다든지 재정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운동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고 전문성으로 무장하지 않는 선출 권력(국회)은 이들 선출되지 않는 국가 관료집단과 대단히 힘겨운 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다. 후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문성과 예산 집행권이다. 현재의 국회는 초선의원들이 다수이며 정당은 정책역량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일단은 매일 매일,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다루어온 관료들과 맞수가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편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 지출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세력 간의 힘의 역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그 역사적 현실적 근거, 즉 냉전과 냉전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의 역사에 의해 좌우된다. 그것은 관료들에게는 관행으로 존재한다. 관행을 바꾸려면 국

가의 이념과 철학이 바뀌어져야 한다. 역사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관료들이 그것을 좌절시킨다는 것을 지난 세기의 혁명의 과정이 잘 보여준 바 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바로 관료들의 의식, 제도, 관행으로 존재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권 물갈이는 아주 제한적인 변화만을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정치세력이 국가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뜻이 있는 정치가라면 당연히 현재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작동, 그리고 세계경제 하의 한국경제의 현실에 대해 연구해야 하며, 동시에 한국 국가의 탄생의 기원, 관료제도, 사법제도, 대학의 수립의 역사, 냉전체제 수립의 기원과 그 피해자 문제, 그리고 헌법 제정의 경과와 그 고민의 내용을 추적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국회 내 개혁세력이 다수를 점했다는 것은 변화를 위한 극히 초보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불과하다. 의식 있는 시민이라면 마땅히 정치세력의 무능력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는 안 될 것이다.

### 3. 현 정치 국면의 성격 - 국가, 자본으로부터의 '시민사회'의 이중적 분리

#### 1)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현재 한국의 정치사회 국면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즉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점차 독자성을 갖게 되는 영역은 크게 세 차원이다. 첫째는 봉건주의 군사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는 과정, 즉 자유화, 근대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중앙권력의 지배 하에 있었던 지역사회의 자율성 강화, 그리고 지구화된 경제 질서 혹은 세계 시민사회의 틀 내에서 한국 '시민 사회'의 새로운 등장이다.

우선 그 동안 한국에서 '사회'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모두가 정치였고, 국가는 모든 것을 포함하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오랜 유교적 왕조국가의 전통을 가진 한국에서 모든 것은 국가로 통했으며, 모든 사회적 사안은 곧바로 정치화되었다. 과거에는 모든 문제가 왕의 책임으로 돌려졌고, 오늘날에는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책임 추궁으로 나타난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미분화, 혹은 정치사회가 국가의 일부로 존재한 상태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에 흡수되어 있었다.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는 이미 90년대 초, 재벌이 정치권의 비호 상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화를 하려는 데서 출발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정당 조직과 대통령 출마사건은 하나의 중요한 에피소드였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무렵부터 과거의 군과 공안기구를 대신하여 보수언론의 정치적 역할을 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선 이후에는 보수적 시민단체가 등장하고 보수 기독교인들이 대규모 우익집회를 여는 등 그 동안 국가의 보호막에서 안주해온 보수적 시민사회가 스스로 서기 위한 몸부림을 하였다. 특히 90년대 이후 보수언론은 보수적 시민사회의 가장 강력한 교두보였다. 즉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과정의 선두주자는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아니라 재벌과 언론이었다.

이번 선거의 의의는 바로 국가의 일부이던 정치사회가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시민사회와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자유주의 세력의 해계모니 확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 계급 정당의 제도권 진입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면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모든 사회적 이슈가 정치라는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자율적인 영역으로 남을 수 있는 중요 계기다. 대통령 혹은 중앙권력의 장악이 모든 문제해결의 지름길 이던 시절이 지나가고 시민사회의 (상대적으로) 자율적 권력이 착근하는 계기가 된다. 물론 그 자율적 권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냉전적 권력질서가 육성해 놓은 보수적 시민사회라는 강한 맞수와 대결을 벌여야 한다. 새로운 행위자인 시민운동은 태생과 더불어 이미 50년 동안 국가의 후광 아래 터를 닦아 놓은 구 세력- 언론, 학교, 교회 등 -의

권력기반과 물질적 기반을 허물어야 하는 힘겨운 과제를 안게 된다. 보수적 시민사회의 힘은 과거에는 국가권력의 비호였지만 이제는 '물질적', '제도적' 힘으로 존재한다. 그 대변자는 한나라당이다. 여기서 이 구세력이 터를 잡는 과정의 부당성을 문제 삼은 '과거청산'을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친일관계법, 사립학교법,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현실적으로는 시장질서의 공정성 확보가 후발주자인 진보적 시민사회가 존립하는데 더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둘째로, 중앙과 지역의 관계에서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공간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2003년의 부안 핵 폐기장 건설 문제에서 이미 중앙권력의 일방적 지역지배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선거가 한국의 정치사에서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중앙 권력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 행정권력(각 관공서와 경찰), 지자체 및 단체장, 지방의회 등 지역 권력기관의 개입을 극소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앙 행정권력의 통제력이 이완된 지역사회는 앞서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바로 그간 중앙권력이 심어놓은 보수적 시민사회의 헤게모니가 확고하다. 지방의 각 단체장과 중요 인사는 모두가 과거의 연고로 얽혀 있다. 지자체의 각종 건설사업이나 사업 불하 과정에서 기업의 로비와 유착은 확고하다. 경찰, 변호사들과 지역 이해집단 간의 먹이사슬도 음성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가와 자영업자들과 이들 간의 유착이 존재한다. 향우회, 산악회, 해병전우회, 동문회, 지역언론 등으로 거미줄처럼 엮인 지역 시민사회는 최근에 등장한 사회운동 조직을 압도한다. 지방의회는 개혁적 자치단체장을 보수적으로 견제하는 토착 권력의 거점이 되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풀뿌리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는 지역 기업가, 자영업자, 언론의 위기의식을 가중시키고 이들을 단결시키고 있다. 경상도의 구 한나라당, 전라도의 구 민주당의 지역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들의 항배는 지역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그 틈을 타고 후발주자인 지역 시민운동이 지역사회에 끼여 들어갈 수 있을까?

셋째로 한국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변화는 곧바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지구 자본주의, 지구 시민사회의 일부로 편입되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개입력 약화는 곧 정치적 탈냉전 즉 국가가 모든 것이었던 시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국가=사회라는 도식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미 세계 자본주의 세계 사회의 일부임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물론 자본주의 정치경제질서는 이미 출발부터 일국 단위에서만 재생산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의 개입주의국가/발전국가/냉전국가/복지국가는 일국주의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갖고 있었으며, 그것은 나름대로의 물질적 근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탈근대/탈개입주의국가/탈냉전/테러와의 전쟁/WTO체제/신자유주의 질서는 다국적 미디어환경 /초국적 시민운동 등과 더불어 이미 국가=사회라는 전통적 틀을 무너뜨려왔다. 물론 각 나라 내에서의 권력관계나 계급질서는 나름대로의 국가적 특수성을 간직하고는 있으나 점점 더 지구차원에서 공통점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결국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독자성 확보는 곧 '시민사회'의 탈국가화, 시민사회의 동아시아, 세계적 성격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국 내에서의 집권 정치세력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다. 노동당이 집권한 브라질이 국제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회운동이 단순한 국가개혁 운동의 차원에서 벗어나야 하는 물질적 근거도 여기에 있다.

## 2) 자본의 식민지로서의 시민사회, 그 험난한 진로

한국의 정치적 맥락에서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분리되는 현 시점은 사실상 시민사회가 자본의 식민지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의 냉전지배체제는 곧 성장지상주의 지배체제이기도 했으며, 그것은 90년대 중반이후에는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이기도 했다. IMF 경제위기는 한국 내 신자유주의 질서를 착근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6,70년대의 성장지상주의는 이제 경쟁력 지상주의, 외국자본 투자유치 지상주의, 효율성 지

상주의로 모습만 바꾸어 엄존하고 있으며, 급기야 한국인의 생활세계 전반을 완전히 식민화 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외국자본 도입,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철폐, 노동 유연화로 연결되는 일련의 ‘신화’는 그나마 국가에 눌러 빈사상태에 있던 시민사회의 입지를 더욱 좁혀 놓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이 점에서 ‘국민의 정부’ 이상으로 경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였으며, 지난 번 김대중의 당선과 노무현 당선, 이번의 우리당의 승리는 바로 이러한 경제가 외국 자본의 식민지로 변해 있는 상태를 용인한 조건에서 가능했다. 월스트리트가 김대중과 노무현의 집권을 선호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기업 지배구조 변화,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노동자 경영참가 등의 시도는 자본 측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였으며 정치권력을 일방적으로 자본 측의 편을 들었다. 통신, 전력, 철도 등의 민영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기업 측의 고용 유연성 지원을 위한 변형근로시간제, 비정규직화 작업이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되었다. IMF 위기 체제 하에서 경제 살리기의 방편으로 추구된 주택경기 활성화는 중간층의 부를 부자들에게 이전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신용카드 납탈은 중간층을 은행 채무 노예로 전락시켰다.

기업이 투자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저항은 극도로 축소되어야 할 것인가, 투자의 자유는 시민의 생존의 자유에 앞서는 것인가의 문제가 의제화되기 시작했다. 거시적으로 보면 “향후 시장경제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대책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의료 및 교육개방 정책을 어디까지 밀고 갈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등등 모든 문제에서 공적인 영역은 자본의 이윤추구와 효율성 강화를 최소한도로 보조하는 것으로 자리매김 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최소한도의 안전판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둘러싼 세력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한국에서 정치변혁은 지구경제,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극성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는 곧 자본으로부터 시민사회의 탈식민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과 사용자의 양보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노동운동이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가, 시민운동이 공공성 확보운동으로서 힘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에서도 자본의 식민화와 그에 대한 저항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문제 특히 일자리 창출이다. 여기서 개발론과 환경론, 혹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개발과 지속가능한 개발론과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후자가 승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전자의 승리가 불가피하지만 후자는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갖고서 패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지자체는 세수 확보를 위해 투자 활성화와 개발을 필요로 한다. 지역 자영업자와 노동자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카지노라도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기업가가 되고 지자체가 기업가가 되었으며, 대학이 기업이 되었고, 공공기관이 기z업이 되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은 팔 수 있는 모든 것은 판매했고 모든 직원을 세일즈맨으로 변화시켰다. 여기서 단기적 효율, 이윤확보,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의 대립 축이 형성된다. 기업의 개발이익, 지자체의 세수확대, 소수의 지가상승 이득분을 위해 다수의 주민의 삶이 희생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시민‘사회’는 어떤 반박 논리와 대항 조직을 준비하고 있는가? 냉전 하에서 마비된 상상력은 효율성의 담론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대안없음(There is no alternative)의 신화를 이미 널리 유포한지 오래이다.

#### 4. 맺음말 – 사회운동의 입지

그 동안 한국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불렀던 것의 대부분은 사실상은 정치운동이었다. 학생운동으로 분류되었던 것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학생정치운동이었지 학생 문화운동은 아니었다. 우리가 시민운동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상



시민정치운동이었지, 시민문화운동 혹은 유럽에서 말하는 새로운 가치지향을 가진 신 사회운동 혹은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는 아니었다. 한국에서 정치적 사회운동은 분명히 존립 근거가 있었으며,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했다. 즉 국가가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고 모든 사회적 의제가 곧바로 정치화되었던 한국에서 정치변화를 가장 일차적인 과제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 그러나 정치사회가 시민사회와 조응하지 않는 조건에서 정치변화를 지향하던 세력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 나머지 대중을 참여의 주체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대체로는 과거 학생정치운동, 시민정치운동에 몸담았던 사람들인데, 어떤 점에서 그것은 그들에게 그것은 존재의 이전이 아니라 존재의 연속이고, 계급질서의 변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급 질서 내의 위치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옛날에도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고, 지금은 이제 직업 정치가로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셈이다. 문제는 그들의 대부분은 사회를 변혁하려는 운동에 종사한 경력이 별로 없다. 그들 중 일부가 이제 과거 견지했던 가치와 이념은 포기하고 정치가로서의 입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래부터 가치와 이념을 갖고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회’라는 매개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정치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은 하기에 따라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시민사회의 변혁이 없이 정치변혁이 없다는 사실을 거꾸로 자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 현대 역사에서 지금이야말로 사회운동이 이제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첫 시기가 되었으며 사회운동과 정치가 이제 자신의 입지를 갖고서 상호 협조, 혹은 갈등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즉 정치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지금이야말로 사회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시점이며 사회운동이 반대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창조적 운동으로서, 그리고 특정한 이념과 가치를 가진 조직적 실체로서 설 수 있는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나 사회가 이념적 토대를 구축할 시점이다. 국가 혹은 정치경제로부터 시민사회의 이중적 분리 국면은 곧 냉전 하에서 억압된 정치적 상상력의 해방, 그리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경제에 식민화된 사회적 상상력을 해방의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60여 년 간의 냉전, 분단은 한국 정치가나 사회운동가, 지식인의 상상력을 결정적으로 제한하였다. 극우반공주의의 단세포성은 어떤 이견이나 이론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 야만 상태를 조장하였다. 반드시 한국만 그러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냉전 질서 하에서 ‘국제적인 것’은 곧 미국의 표준에 따르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곧 미국의 민주주의였다. 시장경제는 곧 합리적인 것과 동일시되었다. 반공이라는 가치 아닌 가치는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형편없이 왜소화시켰다. 국가주의의 무지맹목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는 성토하면서도 일본의 우익의 정치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무지와 천박성을 깔고 있었다. 가까이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분노하면서도 그것이 과거의 한국의 운명과 깊이 관련되었던 역사적 사건 즉 미국이 개입했던 한국전쟁의 사실상 연장이며 미국이 개입했던 베트남전의 재판임을 알아채지 못하는 집단적 지적 무능력과 판단력 부재를 드러내 보여 주었다.

냉전 하에서 기개와 상상력이 갇혔던 한국에서 역대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의 역사의식의 빈곤이 가장 두드러졌다. 그들은 일제 식민지화의 역사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없고, 분단과 전쟁의 과정과 경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없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소신과 입장이 없다. 한국에는 처칠, 빌리브란트, 미테랑, 케네디와 같은 꿈을 가진 정치가가 없었으며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정도로 감히 ‘아시아적 가치’를 제창할 정도의 지적인 밀천이나 용기도 없다. 냉전과 분단은 여운형과 같은 배포와 식견, 김구와 같은 열정, 김규식과 같은 지조를 갖는 정치가를 완전히 퇴장시켰으며, 그들 정도의 잠재적 능력을 갖는 정치가의 등장을 막았다. 그래서 무대에 나타난 정치가들은 미국을 대상화 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을 갖지 못한 졸팽이들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난 60년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단세포의 시대였는지 보여줄 것이며, 훌륭한 사고와 맑은 영혼을 가진 많은 사람이 얼마나 이 야만의 채찍에 희생되

있으며, 지식인들이 얼마나 왜소하고 굴종적이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냉전의 유산으로서 국가보안법의 청산이 여전히 정치적 사회운동의 마지막 남은 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없애야 현대 한국인들을 짓누르는 무지와 단세포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계기가 열리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체제는 자본주의 = 민주주의의 도식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앵글로 색슨형 자본주의의 유일 모델 가설, 미국 표준 가설,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는 없다는 가설을 수반하고 있다. 냉전의 상상력 제한은 곧 냉전 자본주의의 상상력 제한이다. 한국의 근대(식민지와 분단)는 내면성의 부재, 즉 헤겔이 말한 바 사람들이 '자연적 직접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의식의 수준에 머물게 하였다. 그대서 노동과 의사소통에는 성찰의 과정이 없었고, 노동은 본능적 욕망( 권력에의 복종, 물질의 추구, 가족 집착)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학교에서부터 등수가 지배하고 모든 경제발전과 사회관계는 숫자로 치환가능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등수와 서열을 모르는 한국인들은 불안해 했다. 한국인들의 내면성의 공백은 외면의 치장, 강자에의 추종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서 예를 찾기 어려운 성형수술의 열풍, 원정출산이라는 희대의 코메디는 바로 한국 근대의 위기, 내면성의 위기, 냉전과 분단이 조장한 단세포성, 90대에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의 시장근본주의가 총체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교과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강조되는 교양의 표준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교양을 담지하고 있는 사회적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인권, 환경, 여성의 가치를 제창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은 모두 이러한 지점에서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운동의 공학이 아니라 운동의 기반이며, 철학적인 기초다. 미국이 신자유주의에서 신보수주의로 이행하는 이 시점은 세계의 지형도가 바뀌는 국면이다. 신자유주의 반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정치와 한국의 시민사회는 큰 이야기와 긴 호흡을 필요로 한다.